

조계종 총무원장은 4월 24일 동부건설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가운데)과 변호의 동부건설 사장이 조인서에 사인하고 있는 장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기공식이 4월 30일 오전 11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각 교구본사주지 등 건축부지 현장에서 개최된다.

연면적 5,085평, 대지 1,375평, 건평 694평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2003년 10월 완공예정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하 역사기념관)에는 전시실, 공연장, 수장고, 주차장, 불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멀티미디어라이브러리, 총무원장 집무실 및 회의실이 갖춰진다. 특히 지하 1층 650명에 마련되는 전시실에는 한국불교 1600년의 역사와 함께한 불교유물을 전시하여 성보문화재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게 된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 30일 착공

380억 투입, 지상·지하 각 4층 내년 10월 완공

이들위해 기념관 추진위원회는 전시실의 경우 박물관 전문시공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시설공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관을 완공한 이후 건립되는 2층의 별관 건물에는 영어·중국어 등의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장이 마련된다. 지난 1996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문화회관 6월 기공'을 발표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조계사 무허가건물, 사도와 사유지 등의 사안이 불거지며 2001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7번에 걸쳐 인허가 심사를 거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을 제하면 실 건립비용은 380억원이다. 이중 50%인 190억원은 정부예산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올해 70억, 내년에 12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은 예산확보에 문제

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역사문화기념관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자체 예산의 비중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추진위 실무를 맡고 있는 이석심 총무부 차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총무원 예산과 정부 예산으로 짓겠다고 선언했으나, 사부대중의 뜻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모안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모금운동이 이뤄질 경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소시지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 진척상황을 소상히 공개하도록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전시실, 국제회의실, 공연장 등 갖춰

신도 모금 추진, 공사진척 인터넷 공개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이후 만 6년이 지나서 기공식을 갖게 된 역사기념관은 지난 1937년 조계종 총본산건설 운동으로 완공된 조계사 대웅전에 이은 조계종 통합종단 출범 40주년 만에 또 하나의 현대적인 총본산건설 불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추진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역사기념관 건립불사는 2001년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불

사도와 사유지 구역을 제외하고, 조계사와 총무원지역을 나눈 지적 분할을 통해 3월 18일 종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립추진위원회는 4월 22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공사를 동부건설(대표 백호익)로 결정, 24일 동부건설과 180억원에 정식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역사문화기념관 불사비 총액은 640억원. 이중 이미 확보한 부지매입비 260억원

구성한다 하더라도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적위임이나 계단위임들이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순수한 의제위원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다.

의제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과제다. 조계종은 이번 구성되는 의제실무연구회가 일단 가사 통일화 작업에만 나서지만, 향후 의제위원회를 구성해 승복 유통문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밀한 세부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가사 통일에만 몰두하겠다는 것도 의제실무연구회가 갖는 한계 외에 의제개혁 문제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겠다는 계산에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제개혁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이것은 스님들의 관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등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이웃 위해 ‘희망의 등’을

등달기 운동 펼치는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본사가 공동 주최하고 생명나눔실천회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여성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선포식이 4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거행됐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금을 전달해, 일상속에서 깨달음의 사회적

사회로 회향하는 신행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신행문화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 실천을 전개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파일 등을 달 때 등을 하나 더 다는 것입니다. 신도 또는 신행단체들이 봉축 등을 달 때 별도로 사장이 지정한 '희망의 등'을 달아 이웃을 위한 축원발원의 형태로 '○○가 ○○를 위해'란 꼬리표를 달면서 일정액의 보시금을 원하는 복지단체나 개인에게 전달하도록 기탁하면 됩니다."

◆현재 신도들의 반응은. "불자 개개인 물론 조계사, 봉은사, 수덕사, 도선사, 수국사 등의 주요 사찰신도회와 생명나눔실천회, 불교여

자기 위주 신행문화 사회 회향 유도

보시문화 봉축후도 이어지게 노력

회향을 추구하는 신행혁신운동에 나선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으로부터 행사 취지와 활동계획을 들어보았다.

◆이 행사가 갖는 의미는. "올해는 월드컵을 비롯하여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복잡잡박한 국가대사에 발맞추어 모든 불자들이 자비 정신의 실천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를 신행혁신운동의 계기로 삼으려는 뜻도 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신행문화에서 이웃과

성개발원, 우리는선우 등 신행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봉축시즌이 다가오면서 개별 사찰과 신행단체들의 동참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후속 계획은. "봉축기간 이후에도 보시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찰 및 신행단체가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나 개인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토록 하고, 모범적인 신행문화는 발굴해 불자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참문의= (02)733-7277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a.com

조계종, 왜 의제개혁 나섰나...

현상태론 위의·질서 확립 어려워

조계종이 이달 중 '의제실무연구회'를 구성키로 함으로써, 그동안 미뤄져오던 종단 의제 개혁이 본격화된다. 사실 의제 개혁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계종은 지난 96년 율사들을 중심으로 의제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1년여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고, 또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조계종이 또 다시 의제 개혁에 나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사문화되다시피 한 현재의 의제로는 더 이상 승가의 위외와 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계와 관계없이 가사를 착용하다보니 승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수행풍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각급 승가고시가 정착되고 지난해 9월 법계법

이 제정·시행되면서 의제 통일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도 한 이유다. 또한 현재의 승복만으로는 조계종 소속임을 알기 어렵고, 따라서 스님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견해도 반영됐다.

두 번째는 승복의 반응, 유행, 고급화 등 승가 본연의 자제에 맞지 않는 풍토를 바

성은 강조하면서도 접근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제실무연구회가 법계위원회의 산하 기구에 불과해 가사 문제 외에 승복 유통 문제 등 의제 개혁 전반을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96년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의제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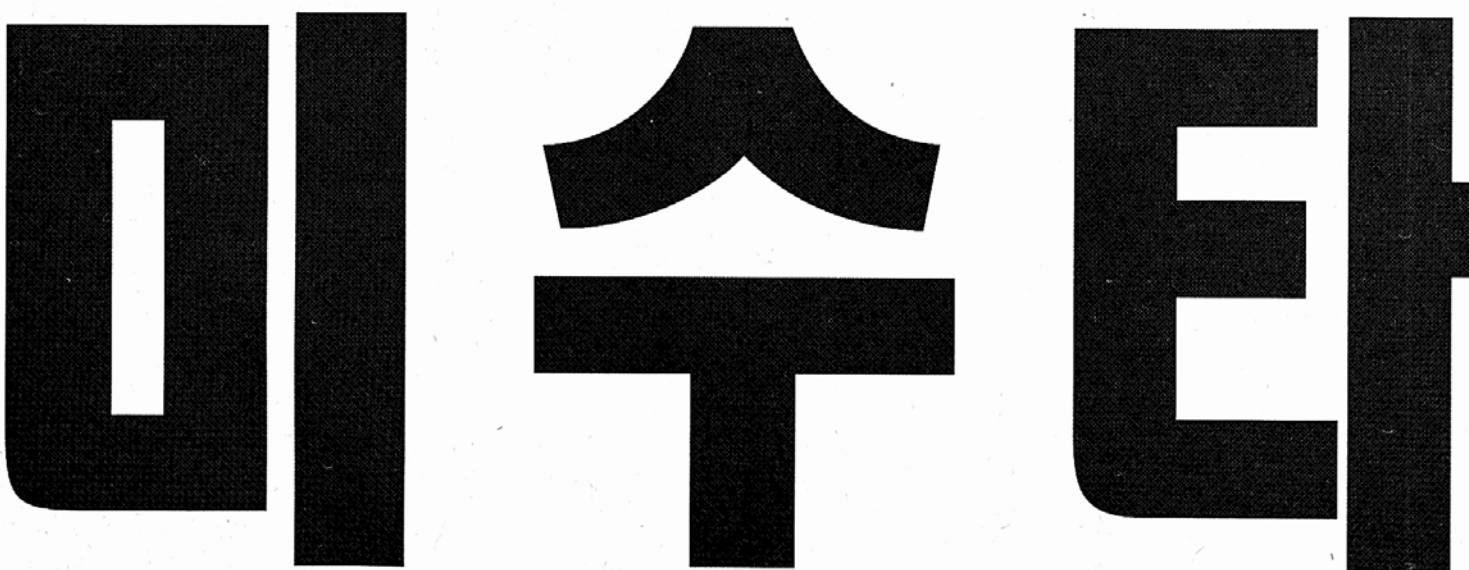
승복 반응·고급화... 수행풍토 저해

향후 10년 겨냥 세부계획 수립 필요

로잡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사와 장삼의 경우 소재에 따라 200만원이 넘기도 하고, 심지어는 편리성만을 고려한 맞춤형 형식의 고가 승복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조계종은 이 같은 '거품'을 빼지 않고서는 승복의 본래 의미조차 상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은 의제개선에 대한 필요

은 더 이상 손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담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무 관계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종단 직속의 의제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의제개혁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립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중법상 의제위원회를 구성할 법령이 없는데다, 법령을 만들어

상표등록



반도체 안전 전구 전자 인증

◆본 미슈타 반도체 안전 전구와 미슈타 반도체 전자 인증은 상표 실용, 위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3건)

서울, 경기 서부대리점 성남 031-756-6307 서울, 경기 동부대리점 하남 031-791-8871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대구 053-591-4861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긴급 서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첨단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